

4일 Market Index	
코스피 2580.80 (-83.83)	코스닥 731.75 (-28.62)
금리 (미국 9년) 2.931 (-0.050)	환율 (원/달러) 1342.20 (+0.80)

## 4% 더 내고, 2% 더 받는다... 의무가입연령 상향 검토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연금개혁 추진계획 심의·확정**  
세대별 형평성 맞게 인상속도 조절 자동조정장치 통해 소진시점 늦춰 최대 2088년까지 재정안정화 목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다' 구조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줄여 세대별 형평성을 맞추고, '자동조정장치'를 처음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뤄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우선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이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6년 만의 인상이다.

명목소득대체율도 42%로 높인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수준을 나타낸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지만 1999년 60%, 2008년 50%로 계속 낮아졌다. 당초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42% 수준으로 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최근 3년간의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조정률로 반영해 연금액 인상률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정부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보다 32년 뒤인 2088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 인상을 통해 2056년으로 예정된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최근 3년간의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조정률로 반영해 연금액 인상률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정부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보다 32년 뒤인 2088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3% 넘게 하락한 코스피** '9월 약세장'에 대한 경계감과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664.63)보다 83.83포인트(3.15%) 폭락한 2580.80에 장을 마치면서 2600선이 붕괴됐다. 기관과 외국인인 7308억원, 9865억원씩 순매도했다. 개인만 1조6485억원을 순매수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 “가상자산, 기본법 없이 발전될 수 없어”

**메트로신문 '감사 리더스 씨밋'**  
김용환 법무법인 세종 고문 가상자산 보호법의 이해 강연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 감사(監事)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4 감사 리더스 씨밋(Leaders Summit)' 세 번째 모임이 열렸다. 이번 감사 씨밋은 지난 7월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이해하고 가상자산의 제도권화, 미래성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회사 감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씨밋을 개최했다.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금융권 일부에서 내부 통제 이슈가 발생한 것도 암묵지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매뉴얼이 아무리 완벽해도 금융사고 방지는 영원한 숙제이자 고민거리"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어 "감사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조직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



김용환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4 감사 리더스 씨밋'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고 믿는다"며 "감사 리더스 씨밋이 동명상련의 입장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우 메트로신문 언론윤리실천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회사 경영진들은 직원들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지 않으면 절대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20만 금융인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역할을 성실히 수행

한다면 내부통제 관련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이해'를 강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가상자산보호법은 지난 7월 시행됐고, 이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둔 최초의 국내법이다.

김용환 고문은 "가상자산법의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기본법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가상자산 산업이 어떻게 발전 될 수 있는지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은 투기적으로 보는 시선이 강했지만 현재는 하나의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앞으로는 가상자산산업으로서 자산 포트폴리오 수단의 하나로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 ‘대출 절벽’ 논란에 답한 이복현 “추석 전 실수요자 보호 논의”

은행 기계적·일률적 대출금지에 “금융당국과 공감대 없었던 조치”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대출 실수요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추석 전에 은행장들과 만나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대출 실수요자, 은행 직원, 부동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수요자가 겪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반응한 것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속에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 조이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은행별로 대출금리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제한이나 기준이 달라졌다. 대표적으로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중단한 곳도 나왔다. 가계부채를 잡는 카드 중 하나로 제시된 규제였지만, 대출을 하려는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가계대출 관리는커녕 혼란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조절 속도가 좀 늦어지더라도, 무주택자들이나 교육 등 목적으로 주택 관련 추가 금융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한 은행의 사례를 언급하며 "너무 과한 일률적·기계적 금지"라며 금융당국과의 공감대가 없었던 조치라고 덧붙였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국회, 기후위기시계 국회 의사당 앞 설치 /사진 뉴스스
- ▲ 윤 “체코 원전 사업 성공적 완수”... 전략적 동반자 강화

- ▲ 검찰, 안귀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 속기소
- ▲ 국정원 “북 수해 책임간부 다수 처형 동향 예의주시”



- ▲ 조국혁신당, 거대 양당에 “민생개혁협의회 체 만들자” /사진 뉴스스
- ▲ 한동훈, 여당 3선 의원과 오찬... 채상병 특검 의견 들어